



도덕기반이 정치이념, 정치적 의견표명, 관용에 미치는 효과*

류원식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 연구는 하이트의 도덕기반이론이 제시하는 5가지 도덕기반, 즉 돌봄-위해, 공정-부정, 충성-배신, 권위-전복, 고귀함-비속함 등으로 구성된 요인구조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덧붙여 도덕기반 요인들이 정치이념을 설명하는지 알아보았으며, 추가적으로 정치적 의견표명과 관용에 미치는 효과도 검토했다. 성인 유권자 696명을 대상으로 웹기반 조사를 이용해 수집한 자료로 검토한 결과, 하이트가 제시한 5요인 도덕기반 모형을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와 내용적으로 유사한 4요인 도덕기반 모형(돌봄동정, 차별반대, 전통충성, 혐오거부)을 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차별반대는 정치적 보수주의와 부적인 관계를 보였지만, 전통충성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도덕기반 중 차별반대와 전통충성은 정치적 의견표명에 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돌봄동정과 혐오거부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차별반대 도덕기반 요인은 정치적 관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의 함의를 도덕기반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논의했다.

핵심어: 도덕기반, 정치이념, 보수주의, 정치적 의견표명, 정치적 관용

* 이 논문은 류원식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논문연구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논문을 출판하기까지 좋은 비판과 제언을 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과 사려 깊게 심사를 진행해 주신 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장님과 편집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연구지원을 받았습니다.

** wonsik.ryu@kt.com

*** jwrhee@snu.ac.kr, 교신저자

1. 서론

보수주의나 진보주의와 같은 이념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일은 민주사회의 시민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Jost, 2006; Lane, 1962). 정치이념은 정치적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갖는 신념체계의 일종으로, 복잡한 정치적 현실을 범주화하고, 인식하며, 정치적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좌파니 우파니 하는 용어는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이념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형상화한다. 이념은 때로 형상화를 넘어 현실을 구성하기도 한다. 정치이념은 정치적 현실을 이해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갈등을 유발하는 상징이 되기도 한다.

최근 정치이념을 도덕 가치나 도덕 감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관점이 대두하고 있다(Emler, 2002; Jost, Glaser, Kruglanski, & Sulloway, 2003; Lakoff, 2004/2006). 정치이념은 도덕적 감정과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수주의자가 이민자나 낙태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와 진보주의자가 불평등과 인권침해를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 보수와 진보이념에 조응하는 도덕 가치와 신념,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도덕 감정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접근은 이념적 대립이 본격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적 소통 현실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분단과 전쟁과 같은 역사적 경험은 물론이고 경제적 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한국인의 정치이념도 우리사회의 고유한 도덕적 가치와 신념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최근 우리사회의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갈등은 단순히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이념 때문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충성, 공정한 대우, 약자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도덕적 가치와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요컨대, 우리사회의 정치적 갈등은 정치이념과 함께 그 토대를 이루는 도덕적 가치와 신념에 대한 반응들이 얽히고설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우리사회에서도 도덕적 가치와 감정이 정치이념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지 검토하려 한다. 하이트(Haidt, 2012/2014)는 최근 진화심리학의 자신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인간은 보편적으로 (가) 돌봄-위해, (나) 공정-부정, (다) 충성-배신, (라) 권위-전복, (마) 고귀함-비속함 등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도덕기반(moral foundations)’을 가지며, 이 도덕기반의 요인들이 정치이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의 주장이 옳다면, 우리사회 구성원에게서도 같은 구조를 갖는 도덕기반을 발견할 수 있고, 같거나 유사한 정도의 정치이념에 대한 영향력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일

단 도덕기반이 우리사회에 적용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도덕기반이 정치이념뿐만 아니라 정치적 소통행위도 설명할 수 있는지 탐색하겠다.

하이트의 도덕기반이론에 따르면, 진보적 개인과 보수적 개인은 각각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기반이 다르다. 진보적 개인은 돌봄-위해와 공정-부정 도덕기반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반면, 보수적 개인은 그와 더불어 충성-배신, 권위-전복, 고귀함-비속함 등 5가지 도덕기반이 두루 활성화되어 작동한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도덕기반도 이와 같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려 한다. 우리는 또한 도덕기반이 정치적 소통 행위나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탐색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도덕기반의 구성요인이 정치적 의견표명 행위나 정치적 관용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다. 이를 통해서 우리사회가 지닌 도덕기반의 구성적 특성과 더불어 도덕기반이 정치이념 및 정치적 소통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정치이념의 도덕적 기초

1) 정치이념

이념은 신념, 태도, 가치 중 추상적 내용을 갖는 인지 요소들 간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정치 영역에서 이념은 '바람직한 사회'라는 이상적 목표와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한 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신념과 가치들이 서로 연관된 집합체를 정치이념이라 할 수 있다(Tedin, 1987). 정치이념은 추상적으로 '바람직한'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자유, 평등, 진보, 안전 등 한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포괄하기 때문에(Lane, 1962; Robinson, Shaver, & Wrightsman, 1999), 구체적으로 안보 비용의 증감, 복지지출의 증감, 기업의 자유와 제한, 낙태자결권 찬반 등 개별 사안에 대한 태도에 반영되어 나타난다(Kerlinger, 1984). 정치이념은 그 자체로 복잡한 구성개념일 뿐 아니라 집합적 태도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구분해서 규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 개념을 빼고서 정치적 선택과 행동을 논의하기란 더욱 어렵다.

캠벨, 컨버스, 밀러, 그리고 스토크스(Campbell, Converse, Miller, & Stokes, [1960] 1980)는 이념을 각 개인들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신념체계로 정의하고, 생각과 태도의 조합으로서 신념체계를 행동주의적 방법으로 측정했다. 이들은 이념이 각종 생각들과 태도와 긴밀히 연관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이론적 가정과 달리 일반 시민은 이념적 내용에

합치되게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정치적 태도의 구속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이념이 태도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연관성도 떨어진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념과 태도의 불일치가 이념 자체의 불안정성을 암시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캠벨 등(Campbell et al., [1960] 1980)은 정치이념을 일종의 신념체계로 제시함으로써 과거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만 논의됐던 정치이념을 경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정치 엘리트가 형성한 신념체계를 준거로 삼아 정치이념을 탐구했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 시민도 사회정치적 학습과정을 통해서 이념을 갖추고, 그에 따라 정치적 의식과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Feldman, 2013; Knight, 2006). 결국 사회정치적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관심과 인지 능력 등이 정치 이념 형성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추고 정치적 관심이 높은 개인들이 주로 정치이념을 활용해 복잡한 정치현실을 이해하고 정치적 사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는 논지의 연구가 이어졌다(Lodge & Hamill, 1986).

정치이념의 구성에 주목했던 일부 연구자들은 정치이념이 선호, 성격, 가치 등의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정치이념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두었다(Feldman, 2013; Jost, 2006). 신념과 가치의 영향을 받는 정치이념은 신념과 가치가 정합하거나 안정된 경우 정교하게 발전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부정합하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도 형성될 수 있는 인지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Goren, 2004; Jost, Nosek, & Gosling, 2008). 이런 관점에서 정치이념을 보면, 정치이념의 구성방식은 그 자체가 정치적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은 정치이념을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거나 취사선택하고, 복잡한 사안을 명료하게 이해하며, 사후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거나 판단을 내리게 된다(Lodge & Hamill, 1986). 예컨대, 하밀, 랫지, 그리고 블레이크(Hamill, Lodge, & Blake, 1985)는 개인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계층(rich-poor), 정당(republican-democrat), 이념(liberal-conservative) 등과 같은 도식(schema)을 이용하는 방식을 탐구했다. 개인이 개별 영역에서 얼마나 폭넓고 깊은 지식을 갖추었느냐에 따라, 즉 도식의 발전정도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달랐다.

정치이념은 정치적 태도형성과 판단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도 투표참여와 후보선택은 물론이고 지역주의, 대북문제, 경제정책 등에 대한 태도를 정치이념으로 설명하곤 한다(강원택·김병연·안상훈·이재열·최인철, 2014; 김무경·이갑윤, 2005; 박찬욱, 2005). 그러나 정치이념이 갖는 설명력이 모든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는 데 유효한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으며(이내영, 2009), 특히 정치 사회화의 수준이 낮은 저학력층이나 과잉 정치사회화가 일어나는 지역유권자의 경우에 정치이념의 역할이 오히려 제한된다는 관찰도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이념이 다른 신념과 가치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탐색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이념의 토대를 구성하는 인간 본성, 도덕성, 사회적 변화 등의 가치 요인을 측정해서 정치이념과의 상관성을 탐구한 연구가 있지만(윤성이·이민규, 2011; 한석준, 2013), 이 경우에도 정치이념에 대한 발생적 연원을 함께 제시한 경우는 없었다.

2) 도덕성과 정치선택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나 선택 과정을 보면 정치이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이 개입함을 알 수 있다(Miller, 1999). 예를 들어, 노동자 계층에 속하는 젊은이가 국가안보나 가족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보수적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다.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혐오감이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평소의 이념적 지향성과 다른 선택을 하는 유권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향은 가치지향적 선택을 내리는 개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은 자신들이 중요시 하는 가치 또는 좋은 사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택한다(Lakoff, 2004/2006). 정치적 의견표명과 선택은 개인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나아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데(Emler, 2002), 이 때문에 결국 좋고 나쁨에 대한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관련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2000년대 미국 캔자스 지역 유권자의 보수화 경향이 시사적이다(Frank, 2007/2012). 전형적인 미국 가정이라고 불리는 캔자스 지역 사람들은 기독교의 경건함, 개인의 겸손함, 애국심 등 미국의 근본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최근 이 지역 보수적 정치인은 낙태와 동성애를 반대하고, 테러분자에 맞서 미국을 지킬 것을 호소하는 등 도덕과 가치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 지역 유권자의 보수화 경향을 유도했다는 관찰이 있다. 즉, 도덕 및 가치 자극적 캠페인이 도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정치 이념이 변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에 속한 고연령대 유권자의 보수적 투표성향이 두드러진다(강원택, 2013). 이 역시 저소득 고령층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나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개인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안보와 안전 가치에 대한 의존으로 설명해야 타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가 분화하고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갈등요인이 대두

하면서 우리 사회의 신념과 가치의 분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강남 좌파’나 ‘젊은 우파’와 같은 일견 상충되어 보이는 용어의 등장이 이를 예증한다. 이제 더 이상 반공과 성장은 보수적 유권자의 지배적 가치인 반면, 인권과 복지는 진보적 유권자의 지배적 가치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그보다 우리 사회는 위험한가, 누가 위험하고 의심스러운가, 누가 미운 행동을 하나, 누가 책임져야 할 일인가 등과 같은 가치정향적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이념적 분포가 가능하다.

정치이념의 도덕적 가치기반을 탐구하는 연구는 가치정향적 기준에 따라 정치이념이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엠러(Emler, 2002)는 도덕규약을 ‘사회적 질서(social order)’와 ‘원칙 중심(principled)’으로 구분하고, 정치적 우파는 사회적 질서를 중시하는 반면 좌파는 원칙 중심적으로 사고함을 보였다. 조스트 등(Jost et al., 2003)은 평등 가치를 주장하면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을 지닐수록 진보적 정치이념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레이코프(Lakoff, 2004/2006)는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신념과 가치가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보와 보수는 각각 자애로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느냐 엄격한 아버지의 임무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평등이나 변화와 같은 가치가 정치이념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탐구한 사례가 있다(윤성이·이민규, 2011; 한석준, 2013). 그러나 이를 포함한 선행연구들은 특정 가치와 정치이념 간 관계에 대한 통념을 경험적으로 확인했을 뿐, 도덕적 가치들이 정치이념에 대해 갖는 발생적 기초를 이론적 관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탐구한 것은 아니다. 특히 다차원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도덕적 가치와 신념이 보수성과 진보성이라는 정치이념에 대해 갖는 포괄적 관련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3) 도덕기반이론

하이트(2012/2014)의 도덕기반이론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라 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이 진화적 발생으로부터 어떻게 연원하는지 설명했다.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자신과 자기의 유전자를 가진 자손의 생명을 유지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인간이 진화를 통해 형성한 강력한 적응과제이다. 자손의 고통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와 무관한 짐승의 새끼가 고통받는 것은 진화적으로 형성한 적응과제에 대응하는 유인이 된다. 예시한 경험에 대해서 인간은 흔히 슬픔과 동정심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내보이며, 이와 동시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인간은 자기 자손은 물론이고 짐승의 새끼라도 돌보지 못하거나 무고한 해악을 끼치는 것을 ‘옳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진화적으로 적응하는데,

이 과정에서 형성된 신념체계가 곧 도덕기반이다.

도덕기반은 일차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유전자를 공유한 친족에 대한 도움과 해악에 대한 판단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일반화와 호혜성에 대한 기대 등을 매개로 타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일단 형성된 도덕기반은 유사한 조건에서 간접적으로 자극하는 동인에 대해서도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타인이 피해를 입거나 차별적 대우를 받을 경우에도 ‘옳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요컨대, 타인을 돌보거나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은 옳지만 반대로 해악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면 그렇지 않다는 판단은 돌봄과 공정함과 같이 진화적으로 적응해서 발전시킨 도덕기반을 가치기준으로 삼아 적응과제에 대응한 결과라는 것이다.

개인적 차원의 도움과 해악 여부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도움과 해악 여부도 생각할 수 있다. 공동체에 대한 도움과 해악은 흔히 집단의 배신, 집단 질서의 위반, 상징적 질서의 훼손 등과 관련이 있다. 집단에 대한 충성과 배신, 권위에 대한 복종과 저항 등과 같은 가치 기준은 공동체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과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라 할 수 있다. 고귀함과 비속함에 대한 판단은 불순물의 침투로 인한 오염과 감염과 같은 해악에 대한 역겨움이나 집단적 결속을 해치는 도전에 대한 경멸감과 관련이 있다. 이런 역겨움이나 경멸감을 유발하는 신념 역시 타인과 타 집단에 대한 평가 근거로 이용되는 도덕적 가치로 작용한다.

하이트가 제시한 기본적인 도덕기반은 (가) 돌봄과 위해(care/harm, 이하 ‘돌봄’), (나) 공정과 부정(fairness/cheating, 이하 ‘공정’), (다) 충성과 배신(loyalty/betrayal, 이하 ‘충성’), (라) 권위와 전복(authority/subversion, 이하 ‘권위’), (마) 고귀함과 비속함(sanctity/degradation, 이하 ‘고귀함’) 등 5가지다. 방법론적으로 말하자면, 도덕기반을 측정하는 수십 개의 문항 간 상관성에 기초한 서로 구분되는 요인이 5가지 있다는 뜻이다. 이 중 첫 2가지 도덕기반인 돌봄과 공정은 집단의 가치와 이익보다는 개인의 권리 및 안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개인 중시 도덕기반이라 부르고, 나머지 3가지 도덕기반인 충성, 권위, 고귀함은 집단의 유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결속 중시 도덕기반이라 한다(Graham, Haidt, & Nosek, 2009). 하이트는 최근 기존의 5가지 도덕기반에 자유와 압제(liberty/oppression, 이하 ‘자유’) 도덕기반을 새롭게 추가해서 6번째 도덕기반으로 삼았다(Haidt, 2012/2014; Iyer, Pizarro, Iyer, & Haidt, 2012). 그러나 자유 도덕기반은 척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도덕기반 측정 문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애초에 제시한 5가지 도덕기반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도덕기반이론의 주창자들은 5가지 도덕기반이 문화적으로 보편적임을 주장한다 (Graham et al., 2011). 모든 문화권에서 5요인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학적 관찰과 진화심리학적 논의를 결합한 이들의 논지에 따르면, 인간은 경쟁과 협동이라는 보편적 활동을 통해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가치판단을 지속해 왔는데, 이를 통해 진화적 적응성을 보인 도덕체계를 보편적으로 갖는다는 식의 설명이다. 그런데 5가지 도덕기반의 구성은 보편적이지만 각 신념의 발현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변이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 중시 도덕기반을 중심으로 도덕적 개념을 발전시켜 나갔으며 특히 고학력 중산층에서 돌봄과 공정의 도덕기반을 중시한다고 한다. 반면 인도와 같은 공동체 지향적 사회에서 수행한 현장 연구에 따르면, 고귀함과 같은 결속 중시 도덕기반이 두드러졌다(Haidt, 2012/2014).

하이트의 도덕기반이 문화적으로 보편적이라면, 우리나라 사람의 도덕기반에서도 그가 제시한 5요인구조를 발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만약 문화적 변이성에 대한 하이트의 논의를 수용한다면, 그가 제시한 5요인 도덕기반의 구조는 같더라도 강조되는 개별 신념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는 하이트의 도덕기반을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 예컨대, 이재호와 조궁호(2014)의 연구에서는 도덕 관련 문항과 도덕 판단 문항으로 구성된 도덕기반 문항 중 도덕 판단 문항에서만 5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을 확인했으며, 정은경, 박상혁, 이수란, 그리고 손영우(2016)의 연구에서는 도덕관련 문항에서만 기존의 돌봄, 공정 요인과 함께 충성, 권위, 고귀함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인 3요인구조를 발견했다.

우리는 하이트가 제시한 도덕기반의 5요인구조가 한국사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일단 검토해보려 한다. 그리고 만약 한국인의 도덕기반 요인구조가 하이트가 제시한 그것과 다르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피겠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도덕기반을 검증한 선행연구 중에 이재호와 조궁호(2014)의 연구는 하이트의 5요인구조를 재현하는 데 실패했으며, 정은경 등(2016)도 마찬가지다. 정은경 등은 아예 별도로 3요인구조 모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선행 연구결과 중에는 20대 대학생만이 참여했거나 응답자 중 남성이 75%를 차지하는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이재호·조궁호, 2014; Kim, Kang, & Yun, 2012).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한국사회에서 하이트가 제시한 5요인 도덕기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가?

(1) 도덕기반과 정치이념

하이트(2012/2014)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데 기준으로 작용하는 도덕기반이 진보와 보수가 겪고 있는 이념적 차이의 근간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진보와 보수가 도덕기반을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며 이런 차이로 인해 진보와 보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갖거나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진보주의자는 타인을 배려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돌봄과 공정의 도덕적 신념을 주로 활용하는 반면 보수주의자는 이 두 도덕기반과 더불어 집단의 단결과 종교적 경건함을 중시하는 등 권위, 충성, 고귀함의 도덕기반까지 함께 활용한다. 도덕기반을 통해 정치이념을 설명했던 하이트의 연구는 정치이념을 구조화된 신념체계로 보는 전통적 관점에 도덕기반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정치이념의 토대를 이룬다는 이론적 기여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떤 내용의 도덕기반을 갖추느냐에 따라 정치적 보수성향 또는 진보성향이 달리 강조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레햄 외(Graham et al., 2009)은 도덕기반과 진보와 보수의 정치이념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토했는데,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진보 집단은 주로 돌봄과 공정 도덕기반에 의존하는 반면, 보수 집단은 모든 도덕기반이 두루 활용되지만 특히 진보 집단에 비해 충성, 권위, 고귀함 등의 도덕기반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도덕기반과 정치이념 간의 관계도 범문화적이라고 볼 근거가 있다. 그레햄 등의 연구는 각 국가의 정치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덕기반과 정치이념 간 관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Graham et al., 2011). 언어는 물론이고 정치문화적 배경이 확연히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하이트의 연구와 유사하게 도덕기반과 정치이념의 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이재호·조광호, 2014; 정은경 등, 2016; Kim et al., 2012). 또한 정은경 등은 사회 연결망 분석을 이용해서 진보는 사회적 사건을 판단할 때 돌봄, 공정과 관련된 개념을, 보수는 충성, 권위, 고귀함과 관련된 개념을 더 많이 사용했음을 밝혀 하이트의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했다(정은경·손영우, 2011; 정은경·정혜승·손영우, 2011).

표 1. 하이트와 그레햄 등 선행연구에 나타난 도덕기반의 구조적 특성

도덕기반	돌봄/위해	공정/부정	충성/배신	권위/전복	고귀함/비속함
관련 가치들	배려, 이해	정의, 공평	애국심, 희생	복종, 경의	순결, 절제
기본 가치	개인의 권리 및 안녕		집단의 결속		
분류 기반	개인 중시		결속 중시		

주: 하이트(2012/2014)는 추후 '자유/억압' 도덕기반을 추가했으며, 이는 개인의 개인중시 기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기반과 정치이념 간의 관계가 과연 문화보편적인지는 역시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레햄 등(2011)의 연구는 모두 영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며, 따라서 도덕적 가치나 신념에 대한 언어적 함축의 유사성에 따라 도덕기반과 정치이념 간 관계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우리나라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남성을 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표 1>에 제시한 도덕기반이 우리사회의 정치이념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검토하려 한다. 이는 도덕기반의 구성과 더불어 정치이념과 맺는 관련성에서도 문화보편적 성질을 갖는지 검토한다는 의의가 있다. 만약 이 관계가 범문화적이라면, 진보적 성향을 갖는 개인은 돌봄, 공정 도덕기반이 강할 것이며, 보수적 성향을 갖는 개인은 이와 더불어 충성, 권위, 고귀함 등 도덕기반도 강할 것이다.

연구문제 2. 도덕기반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정치적 보수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2) 도덕기반에 따른 정치적 의견표명의 차이

도덕기반은 과거 정치이념의 차이로 설명했던 변수들, 즉 후보 지지, 사안에 대한 태도 등을 설명하기도 한다. 예컨대, 미국에서 개인 중시 도덕기반이 강할수록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인 반면 결속 중시 도덕기반이 강할수록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Frank & Scherr, 2015). 고귀함과 같은 도덕기반이 공화당 후보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역겨움에 대한 민감도가 강할수록 공화당 후보에 대한 투표의향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Inbar, Pizarro, Iyer, & Haidt, 2012). 또한 개별 도덕기반에 따라 도덕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태도가 달리 나타났는데, 돌봄 도덕기반은 동물 실험, 사형제 등의 사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고귀함 도덕기반은 동성애나 낙태 등과 같은 사안에 영향을 주었다(Koleva, Graham, Iyer, Ditto, & Haidt, 2012).

이상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는 과거 정치이념의 차이로 설명했던 변수들을 우리사회에서도 도덕기반으로 재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보수적 유권자는 진보적 유권자에 비해 정치적 의견표명이 적은 것으로 관찰되는데(박찬욱, 2005; 이준웅, 2012), 이는 젊고 교육수준이 낮은 보수적 유권자가 여론 기후를 감지하고 의견표명을 자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즉 정치적 영역에서 공적 발화로서의 정치적 의견표명은 자아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이뤄지는데, 자신의 의견이 집단 및

사회가 용인하는 가치와 다를 때 의견표현을 회피한다는 선행연구를 참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개이다(Gudykunst, 1998). 이는 정치적 의견표명 자체가 도덕기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함의한다.

베린스키(Berinsky, 1999)의 정치적 의견표명에 대한 논지도 참조할 만하다. 그는 사적 의견과 공적 발화 간의 차이를 ‘사회적 요망성(social desirability)’ 혹은 수용성(acceptability)로 설명한다.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의견을 지닌 이는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만한 방식으로 말하는 대신 질문 자체로부터 회피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컨대, 개인과 집단 간 가치 충돌 시 집단이나 사회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는 의견표현을 적게 하는 반면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는 사회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표현하려 한다. 도덕기반이론에 따르면, 진보적 유권자는 개인적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표명을 하는 반면, 결속을 중시하는 보수적 유권자는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의 의견을 따르되 오직 사회질서가 위협받는다고 인식할 때 비로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다고 한다(Haidt, 2012/2014). 결국 개인 중시 도덕기반을 지닌 자들은 결속 중시 도덕기반을 지닌 자들보다 정치적 의견표명이 활발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충성과 권위의 결속적 도덕기반은 공동체의 규범에 대한 순응성을 함의하기에 이런 도덕기반이 강한 개인은 집단적 합의가 확인된 조건에서만 정치적 의견을 표출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고귀함과 같은 도덕기반이 강한 보수적 유권자는 역겨운 대상이나 비속한 행위에 대해 혐오감을 거침없이 표현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에서는 극단적 집단들의 혐오 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 이들 집단의 의견 표현은 각자가 중시하는 가치와 신념이 우선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여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세운다. 요컨대, 보수와 진보는 도덕기반 때문에 의견표명의 정도도 다를 수 있겠지만 의견표명을 하는 이유 자체가 다를 수 있으며, 도덕기반의 차이가 바로 그 이유가 된다.

도덕기반과 성격 특성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도덕기반이 정치적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함의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성격요인 중 개방성과 외향성은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de Vries, Bakker-Pieper, Konings, & Schouten, 2013; Mondak, & Halperin, 2008; Vecchione & Caprara, 2009), 이런 성격 요인이 도덕기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Lewis & Bates, 2011). 구체적으로 개방성은 돌봄, 공정 도덕

기반과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충성, 권위, 고귀함 도덕기반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고, 외향성은 돌봄, 충성 도덕기반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도덕기반과 성격 특성 간의 관계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돌봄 및 공정 도덕기반은 정치적 의견표명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권위 및 고귀함 도덕기반은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우리는 도덕기반이 정치이념과 독립적으로 정치적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어떤 종류의 도덕기반이 정치적 의견표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검토하려 한다. 요컨대, 보수적인 유권자 가운데에도 정치적 의견표명 의지가 강한 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약한 이도 있는데, 이런 차이가 도덕기반의 유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는 진보적 유권자도 마찬가지다. 즉 도덕기반이 의견표명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 이념과 별개로 도덕기반의 특성에 따라 나타날 것이다. 영향력의 방향과 정도는 도덕기반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3. 도덕기반은 정치적 의견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도덕기반에 따른 정치적 관용의 차이

스토우퍼(Stouffer, 1955)가 교육수준이나 매체 노출 등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이래,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흔히 연령, 지역, 도시 규모, 교육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뿐만 아니라 효능감, 타인에 대한 신뢰 등 문화적·심리적 변수들이 정치적 관용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Sullivan & Transue, 1999; Sullivan, Walsh, Shamir, Barnum, & Gibson, 1993).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결론 가운데 교육수준이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가 있다. 교육과정을 통해 다른 생각과 다양한 사람들을 실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로운 경쟁, 타인에 대한 존중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Sullivan, Marcus, Feldman, & Piereson, 1981). 결국 정치적 관용이란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한 참여의 기회를 제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태도를 의미한다(Gibson, 2006).

스토우퍼(1955)는 공산주의자, 무신론자, 사회주의자 등 비순응 집단을 대상으로 시민적 자유에 대한 허용 정도를 묻는 방법으로 정치적 관용을 측정했다. 시민적 자유는 연설의 허용, 집회의 허용, 공직의 허용 등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흔히 공중 앞에서 말하기(public speaking)를 대상으로 측정한다(송현주·신승민·박승관, 2006; Sullivan et

al, 1981). 최근에는 공론장 개념을 바탕으로 속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으며 의견 표현의 허용 여부를 넘어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노출과 수용이란 관점에서 관용을 정의한다. 속의 민주주의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의 의견표명의 자유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이견에 주목해서 수용하는 의견조정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정일권·이준웅·배영, 2013).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는 관용을 정치적 이견 노출의 허용 여부와 이견에 대한 수용 등을 중심으로 측정한다.

도덕기반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은 하이트(2012/2014)가 제시한 진보와 보수의 배려의 차이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일단 하이트는 진보적 개인들이 배려의 대상을 주변인은 물론이고 동물이나 타국의 사람과 같은 외집단으로 확장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보수적 개인의 배려는 지역 주민, 상이군인 등 공동체와 관련되거나 집단적 충성심이 수반되는 내집단의 경우에 제한된다고 한다. 이런 배려의 차이는 정치적 관용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9.11 테러 직후 내집단의 결속을 강화하고 외집단에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관용 정도가 낮아짐을 보고했다(Skitka, Bauman, & Mullen, 2004).

특히 정치적 관용에 위협에 대한 지각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위협에 대한 지각은 도덕기반 중에서 결속 중시 도덕기반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Skitka, Bauman, & Mullen, 2004; Sullivan, Marcus, Feldman, & Piereson, 1981; Van Leeuwen & Park, 2009). 결속 도덕기반이 강한 이들은 위협에 대한 지각이 큰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도덕기반이 위협인식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대처경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도덕기반이 개인의 이념이나 가치를 공격하는 이견에 대한 수용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의 이념이나 가치를 공격하는 이견에 대한 수용성 여부도 위협인식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도덕기반과 정치적 관용 간의 관계의 정도와 방향성도 개별 도덕기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4. 도덕기반은 정치적 관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방법

인터넷 조사전문업체인 엠브레인은 연구자의 의뢰로 2015년 4월 9일부터 6일간 웹조사를 수행했다. 당시 유권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해서 모집단 비율에 따라 성, 연령, 지역을 기준으로 할당 표집하여 719명의 응답자를 얻었다. 조사 응답률은 15.26%였다. 할당표집을 사용했기에 모집단 특성에 대한 엄밀한 추정은 불가능하지만, 응답자의 인구학적 속성의 분포가 모집단과 유사하기에 대표성을 주장할 수는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도덕기반을 측정하는 문항 중 응답의 성실성을 확인하는 두 문항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 불성실 응답으로 추정할 수 있는 23명을 제외하고 총 696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1) 인구통계학적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성, 연령, 교육, 소득, 계층, 출신지역 등을 포함했다. 성별은 남자 344명, 여자 352명이었다. 연령은 20세부터 59세까지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응답자의 연령을 연속변수로 이용했다($M = 40.28$, $SD = 10.89$). 연령의 분포는 20대가 21.55%, 30대가 23.99%, 40대가 27.73%, 50대가 26.72%였다. 교육은 ‘중학교 이하(1점)’부터 ‘대학원 이상(4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했다($M = 2.95$, $SD = 0.51$). 소득은 월 평균 가구소득에 대해 100만 원 미만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100만 원을 구간단위로 11점 척도로 구성했다($M = 4.90$, $SD = 2.26$). 계층은 ‘낮다(1점)’에서 ‘높다(10점)’까지 10점 척도로 측정했다($M = 4.72$, $SD = 1.71$). 소득과 계층 변수 간 상관관계는 .47($p < .001$)이어서, 향후 분석에 두 변수의 표준화 점수를 구한 후 평균값을 내서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로 삼았다($SD = 0.86$).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등 7개 광역시와 경기, 경북, 전남, 제주 등 9개 행정권역을 포함했고, 분석 시에는 지역주의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광주, 전남, 전북 등으로 구성된 전라출신($n = 70$)과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으로 구성된 경상출신($n = 170$)을 가변수로 구성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1>을 제외한 모든 연구문제와 가설은 도덕기반, 정치이념, 정치적 의견표명, 정치적 관용 등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분석에서는 성, 연령,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등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했다. 지역주의, 세대투표, 계층투표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정치이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김무경·이갑윤, 2005; 김정훈, 2013; 조성대, 2008).

2) 도덕기반

도덕기반은 하이트가 사용했던 32개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 설문지를 이용해서 측정했다. 연구 홈페이지(<http://www.MoralFoundations.org>)에서 제공하는 영문판과 한국어판 설문지를 이용했다. 전체 32개 문항 중 15개의 도덕 관련성 문항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해당 문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고, 15개의 도덕 판단 문항은 옳고 그름의 판단과 관련된 진술문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지를 묻는다. 나머지 2개의 설문 항목은 응답의 성실성을 측정하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 좋은 일을 해야 한다’).

도덕 관련성 문항과 도덕 판단 문항은 5가지 도덕기반을 측정하는 하위 문항으로 구성된다. 개별 도덕기반은 도덕 관련성 문항 3개, 도덕 판단 문항 3개 등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돌봄 도덕기반은 ‘어떤 사람이 잔인한지 또는 아닌지’(관련성 문항),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동정심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판단 문항) 등으로 구성된다. 관련성 문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0점)’에서 ‘극히 중요하다(5점)’까지, 판단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0점)’에서 ‘매우 동의한다(5점)’까지 각 6점 척도로 측정했다.

하이트가 홈페이지에 제시한 계산방식을 따라 5가지 도덕기반은 하위 문항들의 평균값으로 계산했다. 이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 도덕기반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돌봄 .59, 공정 .60, 충성 .61, 권위 .62, 고귀함 .60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앞의 2개인 개인 중시 도덕기반을 합쳤을 때 신뢰도는 .76이었고, 뒤의 3개인 결속 중시 도덕기반은 .83이었다.

3) 정치이념 혹은 정치적 보수주의

정치이념은 선행연구(Graham et al., 2009)를 따라 주관적 진보-보수 성향을 측정했다. 문항은 “귀하께서는 자신의 정치성향이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면 1, 매우 보수면 7 등 1~7 사이의 숫자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질문에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다($M = 3.95$, $SD = 1.15$). 변수값이 클수록 보수적임을 의미하므로 정치적 보수주의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념별 분포는 1점부터 7점까지 각각 1.15%, 8.19%, 24.28%, 37.50%, 20.11%, 6.90%, 1.87%였다.

4) 정치적 의견표명

정치적 의견표명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비전통적/공개적 방식, 인

터넷에서 댓글을 쓰는 비전통적/비공개적 방식, 시위나 집회에 참여하는 전통적/공개적 방식, 온라인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전통적/비공개적 방식 등을 포괄했다(황용석·양승찬·이준웅·이원태, 2011; Ho & McLeod, 2008; Scheufele & Eveland, 2001). 구체적인 산출을 위해 지난 한 달로 기간을 한정했고, 논란이 되는 특정 사안의 선정 시 정치이념 및 도덕기반에 의한 편향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안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정치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기, 주위 사람들에게 정치적 의견 말하기, 정치현안에 대해 토론/논쟁하기,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세미나 및 토론회에 참여하기, 뉴스 기사에 댓글 쓰기, 커뮤니티, 카페 등에 게시글 및 댓글 쓰기, 정부, 공공기관, 정치인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글 및 댓글 쓰기, 온라인 서명 운동에 참여하기 등 총 9가지 문항에 대해 ‘한 적이 없다(1점)’에서 ‘거의 매일 했다(5점)’까지 5점 척도 문항을 이용해서 측정했고($\alpha = .88$), 전체 9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계산했다($M = 1.59$, $SD = 0.55$).

5) 정치적 관용

정치적 관용은 정일권 등(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정치적 소통에 있어서 관용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했다. ‘내 생각과 상반되는 의견이라도 끝까지 읽거나 들으려고 노력한다’, ‘내 생각과 상반되는 의견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찾는다’, ‘내 생각과 상반되는 의견이라도 근거 있고 타당한 주장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 ‘내 생각과 상반되는 의견을 지닌 사람도 자기 주장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과 상반되는 의견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관점을 살펴본다’, ‘내 생각과 상반되는 의견을 일단 인정하기보다 타당한 근거를 들어 반박한다’, ‘내 생각과 상반되는 의견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살펴볼 것을 권한다’ 7개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alpha = .77$). 이 중 ‘타당한 근거를 들어 반박한다’는 문항의 문항간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를 제외한 6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계산했다($\alpha = .87$, $M = 3.68$, $SD = 0.61$).

6) 기타 통제 변수와 정규성 검사

주요 변수 간 관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통제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정치 관여도를 비롯한 변수들을 측정했다. 정치관여도는 선행연구(송종길·박상호, 2006; 이건혁·황현서·심민선·박승관, 2004)를 참고해, 정치 이슈 및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의 중요성, 텔레비전, 신문을 통해 정치 기사/뉴스 보기, 인터넷을 통해 정치기사/뉴스 보기, 정치와 관련된 정보 찾기 등 5개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고($\alpha = .87$), 이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계산했다($M = 3.21, SD = 0.78$). 이 연구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박스플롯을 이용한 검토를 수행한 결과, 3개의 종속변수와 통제변수에서 모두 심각한 편포나 아웃라이어를 발견하지 못했다.

4. 연구결과

1) 도덕기반의 구성

〈연구문제 1〉에 답하기 위해 먼저 도덕기반의 5요인구조를 한국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3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도덕기반 설문에 대한 응답을 오블리민 회전한 최대 우도법을 적용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고,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이트가 제시한 5요인 도덕기반의 구조를 우리 자료를 이용해서 재현할 수 없었다.

먼저 〈표 2〉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도덕 관련성 문항의 경우 3개 요인의 고유값이 1을 넘었고, 스크리 도표 상으로도 3개 요인이 유력했다. 3개 요인의 설명된 총분산은 54.4%였다. 도덕 관련성 문항은 개인 중시 도덕기반(요인 3)과 결속 중시 도덕기반(요인 2)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운데, 요인1은 각 도덕기반 관련 문항이 1개씩 포함되어 있었다. 요인1에 속한 잔인함, 권리거부, 배신, 혼란, 역겨움 문항들은 공통적으로 해악과 관련된다. 하이트(2012/2014)는 돌봄과 위해를 동일한 동인에서 나온 다른 표현형으로 보고 하나의 도덕기반으로 구성해서 제시했지만, 우리 연구결과에 따르면 돌봄과 구분되는 해악 관련 도덕기반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요인 1, 즉 해악 관련 도덕기반은 개인적 해악은 물론이고 집단에 대한 해악과 피해도 포함했다.

도덕 판단 문항을 별도로 요인분석한 결과, 4개 요인의 고유값이 1을 넘었고, 스크리 도표로 보아도 4개 요인이 적절했다. 4 요인이 설명한 총분산은 48.6%였다. 도덕 판단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도 역시 개인 중시 도덕기반(요인 3)과 결속 중시 도덕기반(요인 4)으로 일단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가 자랑스롭다’,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한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등의 문항들과 함께 순결과 비정상 문항도 모두 요인 4에 적재된 결과가 흥미롭다. 우리나라에서는 결속 중시 도덕기반이 포괄적 설명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무해한 혐오 문항은 개인 중시 도덕기반에 속했다. 성 역할 문항(요인 1)과 부자 문항(요인 2)은 1.00에 근사한 요인 적재치를 보여 별도의

표 2. 도덕 관련성 문항과 도덕 판단 문항의 탐색적 요인 분석

도덕 관련성 문항						도덕 판단 문항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성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공통성
도덕 관련성	감정적	.26	-.20	.52	.28	도덕 판단	동물학대	.06	.10	.39	.15	.16
	약함	.36	-.32	.58	.37		살인	.09	.04	.43	.27	.19
	잔인함	.75	-.20	.32	.57		동정심	.13	.16	.55	.35	.33
공정 성	다른대우	.23	-.19	.68	.46	공정 성	정의	.07	.04	.73	.24	.54
	불공정	.50	-.16	.70	.56		공정함	-.03	-.02	.59	.20	.36
	권리거부	.54	-.21	.53	.40		부자	.12	.99	.12	.13	1.00
충성 성	애국심	.22	-.56	.37	.36	충성 성	팀플레이어	.21	.24	.32	.49	.28
	배신	.52	-.39	.24	.32		나라의역사	.01	-.05	.24	.40	.19
	충성심	.41	-.73	.15	.58		가족	.28	.06	.33	.32	.18
권위 성	존경심	.17	-.78	.26	.62	권위 성	성 역할	1.00	.14	.14	.33	1.00
	전통	.38	-.56	.18	.36		군인	.20	.09	.24	.47	.22
	혼란	.62	-.23	.36	.40		존중	.23	.09	.16	.48	.24
고귀 함	품위	.30	-.61	.48	.48	고귀 함	무해한혐오	.11	.03	.50	.43	.31
	역겨움	.71	-.31	.33	.51		비정상	.33	.15	.10	.35	.18
	신	.16	-.52	.10	.27		순결	.28	.13	.26	.60	.37
고유값		4.82	1.94	1.40		고유값		3.43	1.63	1.16	1.06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남녀차별과 빈부격차로 인한 심각한 갈등양상을 고려할 때 이상의 2가지 문항은 우리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도덕 판단 문항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는 다수의 문항들에서 공통성 값이 낮게 나온 데에 있는데, 이는 성 역할과 부자 문항이 다른 문항들의 상관관계와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3〉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하이트가 제시한 도덕기반의 5요인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했다. 그러나 도덕 관련성 문항, 도덕 판단 문항, 그리고 전체 문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모든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즉 RMSEA값은 .05 이상이었으며 CFI와 TLI 등 적합성 지수는 모두 .90에 이르지 못했다. 개인 중시 도덕기반과 결속 중시 도덕기반을 2개의 위계적 요인으로 추가해 구성한 위계적 모형에서도 모형 적합도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결국 하이트의 5요인구조 도덕기반 모형을 우리 사회에 그

표 3. 도덕기반의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RMSEA	CFI	TLI
5요인 모형	판단 문항	379.34	80	.073	.802	.740
	관련 문항	863.31	80	.119	.756	.680
	전체 문항	2293.51	395	.083	.664	.630
위계적 모형	판단 문항	410.62	84	.075	.784	.730
	관련 문항	921.82	84	.120	.739	.674
	전체 문항	2357.96	399	.084	.654	.622

대로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결론 내렸다.

한국사회에 적합한 도덕기반의 구조모형을 구성할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도덕기반의 구조모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자료중심적 방법으로 도덕기반을 구성해 보기 위해 오블리민 회전을 적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별도로 수행했다.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은 7개였지만, 패러렐 분석결과 제안된 요인의 개수는 6개였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검토한 도덕 관련성 문항과 도덕 판단 문항에 대해 각각 수행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하이트의 5요인 분석모형을 적용해서 얻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참조해서, 실효적 요인의 개수가 4개 이하일 것이라고 설정했다.

〈표 4〉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요인1은 애국심, 권위존경, 품위, 전통, 충성심, 신 등을 포함하기에 ‘결속중심 도덕기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요인2는 차별, 약함, 불공정, 권리거부 등 문항과 관련성을 보기에 ‘차별 및 정의 추구’로 해석할 수 있다. 요인 3은 배신, 역겨움, 잔인함, 혼란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질서파괴에 대한 혐오’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인4는 매우 혼란스러운데, 동정심, 공정, 무해혐오, 정의, 가족, 살인금지, 팀플레이 등과 관련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일종의 ‘정서적 유대감과 정의감’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염두에 두고, 요인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했다. 4개의 오블리민 요인과 관련된 문항을 모두 포함해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해 보았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모형의 적합성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표 5〉 모형 1: RMSEA = .074, SRMR = .073, CFI = .818, TLI = .794). 따라서 우리는 이 모형을 기초로 삼아 모형개선을 통해서 최적의 요인구조를 만들

표 4. 한국인의 도덕기반 도출을 위한 자료기반적 탐색적 요인분석

개별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고유성
감정적	0.10	0.44	0.13	0.15	0.76
차별	0.06	0.61	0.07	0.06	0.61
애국심	0.50	0.32	0.05	0.13	0.63
존경	0.75	0.20	0.03	-0.06	0.39
품위	0.50	0.47	0.13	-0.07	0.5
약함	0.20	0.56	0.16	0.10	0.61
불공정	-0.02	0.67	0.31	0.15	0.43
배신	0.32	0.09	0.44	0.22	0.65
전통	0.53	0.08	0.26	0.14	0.63
역겨움	0.16	0.21	0.70	0.01	0.44
잔인함	0.04	0.22	0.70	0.18	0.43
권리거부	0.06	0.48	0.41	0.09	0.59
충성심	0.69	0.07	0.31	-0.04	0.43
혼란	0.09	0.26	0.53	0.21	0.59
신	0.52	0.06	0.08	-0.02	0.72
동정심	0.21	0.33	0.17	0.38	0.67
공정	-0.12	0.22	0.18	0.48	0.68
역사	0.28	0.08	0.03	0.23	0.86
권위	0.57	0.04	0.07	0.10	0.65
무해혐오	0.17	0.14	0.28	0.44	0.68
동물	0.02	0.26	0.06	0.28	0.85
정의	-0.07	0.42	0.23	0.52	0.49
가족	0.17	0.03	0.08	0.40	0.81
성역할	0.34	-0.08	-0.03	0.26	0.81
비정상	0.33	0.00	0.01	0.17	0.86
살인	0.00	0.11	0.05	0.47	0.76
부자	0.12	0.10	-0.03	0.12	0.96
팀플	0.26	0.01	0.08	0.41	0.75
군인	0.32	-0.01	-0.01	0.35	0.78
순결	0.49	0.03	0.03	0.34	0.65
고유값	3.46	2.57	2.19	2.11	

표 5. 한국형 도덕기반 모형의 구성

모형 (설명)	요인1: 돌봄동성		요인2: 차별반대		요인3: 전통충성		요인4: 혐오거부		χ^2	df	RMSEA (SRMR)	CFI	TLI
	조정 방향	최종 방향	조정 방향	최종 방향	조정 방향	최종 방향	조정 방향	최종 방향					
1 (4요인 인자적재치 .35이상 문항 포함)		동정심, 공정 무해함, 정의, 가족, 살인, 팀플		차별, 약함, 불공정, 권리거부		애국심, 존경, 품위, 전통, 충성심, 신, 권위, 순결		배신, 역겨움, 잔인함, 혼란	1066.3	224	.074 (.073)	.818	.794
2 (간단모형)	가족- 살인- 팀플-	동정심, 공정 무해함, 정의	약함-	차별, 불공정, 권리거부	진통- 신- 순결-	애국심, 존경, 품위, 충성심, 권위,	배신-	역겨움, 잔인함, 혼란	497.4	84	.084 (.070)	.864	.831
3 (타당성 모형)	무해함- 정의- 살인+	동정심, 공정 살인	-	차별, 불공정, 권리거부	품위-	애국심, 존경, 충성심, 권위	-	역겨움, 잔인함, 혼란	308.4	59	.078 (.062)	.891	.856
4 (최종모형)	공정- 학대+	동정심, 살인, 학대	-	차별, 불공정, 권리거부	존경- 진통+	애국심, 전통 충성심, 권위	-	역겨움, 잔인함, 혼란	236.2	59	.066 (.050)	.910	.882

주. - : 제거, + : 투입

어 나가는 전략을 택했다.

〈표 5〉의 모형 2는 모형 1에서 요인별 적재치가 낮은 문항을 제거한 간단 모형이다. 그러나 이 모형 역시 만족스럽지 않았다(모형 2: RMSEA = .084, SRMR = .070, CFI = .864, TLI = .831). 모형 2를 구성하면서 제외했던 문항을 단계적으로 재투입하면서 모형적합도를 개선해나갔다. 구체적으로 요인1은 돌봄의 요인과 정의와 관련된 의미가 섞여 있는 요인으로 보이는 반면, 요인2는 정의와 차별금지와 관련된 의미가 섞여 있다고 보였다. 타당한 모형구성을 위한 구별의 원칙에 따라 두 요인이 각각 ‘돌봄’과 ‘차별금지’의 의미를 갖도록 문항을 조정했다. 요인3은 존중, 애국심, 전통을 포함해 요인 의미가 상대적으로 명확했다. 따라서 이런 의미를 만족하는 수준에서 품위 문항을 제거해서 전체 문항의 수를 줄였다. 이렇게 수정한 모형 3의 적합도는 모형 2에 비해 약간 개선된 정도에 불과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모형 3: RMSEA = .078, SRMR = .062, CFI = .891, TLI = .856).

최종적으로 모형 내의 요인1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공정 문항을 제거하고 동물학대 반대 문항을 투입해서 모형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적합도 면에서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다(모형4: RMSEA = .066, SRMR = .050, CFI = .910, TLI = .882). 특히 이 마지막 모형의 요인1은 ‘돌봄과 동정심’, 요인2는 ‘차별대우 반대’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의미적으로 두 요인 간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요인3은 ‘전통과 애국심에 대한 존중’을, 요인4는 역겨움, 잔인함, 혼란 등 ‘혐오 행위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우리는 결국 한국형 도덕기반은 4개의 상호 연관된 잠재요인인 ‘돌봄동정’, ‘차별반대’, ‘전통충성’, ‘혐오거부’ 등 4요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표 5〉가 제시하는 우리의 최종모형은 하이트가 원래 제시한 도덕기반과 구조적인 차원에서 다르지만, 의미적인 수준에서 보면 겹치는 양상이 있다. 우리가 제시한 한국형 도덕기반의 요인 1은 하이트가 제시한 모형의 ‘돌봄’과 의미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돌봄동정’이라고 이름 붙였다. 요인 2는 차별과 불공정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므로 하이트가 제시한 모형의 ‘공정’과 역시 의미적으로 유사하다. 우리는 이 2번째 요인을 ‘차별반대’라 명명했다. 요인3은 하이트가 제시한 모형의 ‘충성’과 ‘권위’를 결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인은 내집단 선호를 함의하는 전통에 대한 존중과 집단 내 권력 및 권위관계에 대한 존중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는 이 두 도덕기반이 한국인에게는 사실상 통합된 도덕적 가치일 수 있다고 해석해서 ‘전통충성’이라 이름 붙였다. 마지막으로 요인4는 역겨움, 잔인함, 혼란에 대한 반대인데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혐오 거부를 의미하기에 ‘혐오거부’라 명명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4요인모형은 하이트가 원래 제시한 5요인모형과 구조적으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도덕기반 요인	개별 문항	추정	z	p(z)
돌봄동정	동정심	1.00		
	살인반대	.48	5.8	.000
	동물학대	.66	6.4	.000
차별반대	차별	1.00	.	
	불공정	1.56	11.4	.000
	권리거부	1.55	11.3	.000
전통충성	충성	1.00		
	권위	.74	10.9	.000
	애국심	.88	10.6	.000
	전통	.86	12.4	.000
혐오거부	역겨움	1.00		
	잔인함	1.05	15.5	.000
	혼란	.82	14.0	.000

로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우리 모형은 하이트가 이론적 전제로 제시한 도덕기반의 진화론적 함의와 정치적 역할을 수용한 모형이기에, 같은 이론적 기초를 갖지만 문화적으로 다른 맥락에서 발견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¹⁾ 이 연구의 향후분석에는 <표 6>에 제시한 한국형 도덕기반을 이용했다.

2) 도덕기반에 따른 정치적 보수주의

<연구문제 2>는 도덕기반과 정치이념, 즉 정치적 보수주의 간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검토했듯이 하이트가 제시한 도덕기반의 5요인 모형을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기에, 대신 이 연구에서 확인한 돌봄동정, 차별반대, 전통충성, 혐오거

1) 이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와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우리는 별도의 표본을 수집해서 같은 요인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2017년 5월 둘째 주에 인터넷으로 1,099명의 응답자를 성, 연령, 지역을 기준으로 할당표집해서 정치의식조사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 연구의 <표 8>에 포함된 문항을 포함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돌봄동정’, ‘차별반대’, ‘전통충성’, ‘혐오거부’ 등과 같은 4 잠재요인이 같은 하위문항을 설명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모형의 적합도도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CFI = .940, TLI = .921, RMSEA = .068, SRMS = .041). 이 논문의 향후분석은 모두 첫 번째 표본(N = 696)을 대상으로 수행한 것이다.

표 7. 도덕기반이 정치적 보수주의에 미치는 효과

	정치적 보수주의						
	<i>B</i>	β	<i>SE</i>	<i>t</i>	<i>p</i>	95% CI	
						<i>LL</i>	<i>UL</i>
(상수)	4.46	—	0.48	9.39	0.000	3.53	5.40
여성(1)	-0.01	-0.01	0.09	-0.14	0.893	-0.18	0.16
나이	0.01	0.11	0.00	2.74	0.006	0.00	0.02
교육	-0.13	-0.06	0.09	-1.56	0.119	-0.30	0.03
지위	0.13	0.10	0.05	2.48	0.014	0.03	0.23
전라출신(1)	-0.17	-0.05	0.14	-1.19	0.235	-0.45	0.11
경상출신(1)	0.16	0.07	0.10	1.75	0.081	-0.02	0.37
돌봄동정	-0.05	-0.03	0.07	-0.65	0.517	-0.18	0.09
차별반대	-0.29	-0.17	0.08	-3.77	0.000	-0.44	-0.14
전통충성	0.25	0.17	0.06	4.14	0.000	0.13	0.36
혐오거부	0.01	0.01	0.06	0.22	0.829	-0.11	0.14
<i>F</i> (10,685)	6.16 (<i>p</i> = .000)						
수정된 <i>R</i> ²	.069						

주 1. *N* = 696.

주 2. '여성'은 여성이 1, 지역변수에서는 '전라출신'은 광주, 전남, 전북 출신이 1, '경상출신'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출신이 1, 나머지 서울, 경기, 제주 등 지역은 0으로 코딩했음.

부 등 4요인을 독립변수로 삼아 정치적 보수주의를 설명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모든 회귀분석은 다중공선성 검토를 거쳤으며, 모든 분석모형의 독립변수의 변량팽창지수(VIF)는 2 미만이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나이, 지위, 거주지역 등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일부 도덕기반은 정치적 보수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동정과 혐오거부는 정치적 보수주의에 유의한 수준의 효과를 보이지 못했지만, 차별반대($\beta = -.17, p < .001$), 전통충성($\beta = .17, p < .001$)은 보수주의에 각각 정적이고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요컨대, 우리나라 유권자는 사람을 차등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를 지닐수록 진보적인 정치이념을 지니고, 전통과 충성의 가치를 중시할수록 보수적인 정치이념을 지

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하이트의 도덕기반의 정치적 기능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한국인의 도덕기반은 모두 정치적 함의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돌봄동정과 혐오거부와 같은 도덕기반은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별반대는 명백히 하이트의 공정 도덕기반과 의미적으로 유사하고, 전통충성 역시 하이트가 제시한 결속적 도덕기반에 속한 문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우리 연구결과 또한 공정관련 도덕기반이 강할수록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갖게 되고, 충성과 권위 등 도덕기반이 강할수록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갖게 된다는 하이트의 설명과 일치하는 점이 있다.

3) 도덕기반에 따른 정치적 의견표명과 관용

〈연구문제 3〉은 도덕기반이 정치적 의견표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것이다. 정치적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견되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한국형 도덕기반을 구성하는 4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정치적 보수주의와 더불어 정치관여도를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했다. 우리는 정치 관여도가 높으면 정치적 의견표명도 강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정치관여도 $\beta = .40, p < .001$, 〈표 8〉 참조).

도덕기반이 정치적 의견표명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4개의 도덕기반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효과를 보였다. 돌봄동정과 혐오거부는 정치적 의견표명과 부정적인 관련성을 보인 반면(돌봄동정 $\beta = -.14, p < .001$; 혐오거부 $\beta = -.12, p < .01$), 차별반대와 전통충성은 모두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차별반대 $\beta = .12, p < .01$; 전통충성 $\beta = .12, p < .01$). 앞에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차별반대는 진보적 성향과 관계가 있고 전통충성은 보수적 성향과 관계를 보였다. 그런데 이 두 도덕기반이 강할수록 정치적 의견표명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서로 다른 도덕적 가치 때문에 모두 정치적 의견표명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돌봄동정과 혐오거부 도덕기반이 강할수록 정치적 의견표명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인다는 결과도 흥미롭다. 이 두 도덕기반은 정치이념과 직접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지만, 정치적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부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

〈연구문제 4〉는 도덕기반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교육수준이 정치적 관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에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했다. 실제 분석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관용수준이 높음을 확인했다($\beta = .10, p < .01$). 또한 정치 관여도 역시 정치적 관용에 대해 상관성을 가질 것으로

표 8. 도덕기반이 정치의견표명에 미치는 효과

	정치적 의견표명						
	<i>B</i>	β	<i>SE</i>	<i>t</i>	<i>p</i>	95% CI	
						<i>LL</i>	<i>UL</i>
(상수)	0.84	—	0.23	3.71	0.000	0.39	1.28
여성	-0.01	-0.01	0.04	-0.30	0.766	-0.09	0.06
나이	0.00	0.0	0.00	0.82	0.411	-0.00	0.01
교육	-0.02	-0.01	0.04	-0.39	0.699	-0.09	0.06
지위	0.05	0.07	0.02	2.01	0.045	0.00	0.09
전라출신	0.06	0.03	0.06	0.87	0.385	-0.08	0.18
경상출신	0.07	0.05	0.04	1.47	0.143	-0.02	0.15
정치이념	-0.00	-0.01	0.02	-0.26	0.794	-0.04	0.03
정치관여	0.28	0.40	0.03	11.01	0.000	0.23	0.33
돌봄동정	-0.11	-0.14	0.03	-3.66	0.000	-0.17	-0.05
차별반대	0.10	0.12	0.04	2.82	0.005	0.03	0.17
전통충성	0.08	0.12	0.03	3.12	0.002	0.03	0.13
혐오거부	-0.08	-0.12	0.03	-2.99	0.003	-0.14	-0.03
<i>F</i> (12,683)	16.21 (<i>p</i> = .000)						
수정된 <i>R</i> ²	.208						

주 1. *N* = 696.

주 2. '여성'은 여성이 1, 지역변수에서는 '전라출신'은 광주, 전남, 전북 출신이 1, '경상출신'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출신이 1, 나머지 서울, 경기, 제주 등 지역은 0으로 코딩했음.

추론할 수 있는데, 정치관여도가 높은 사람의 정치적 관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beta = .15, p < .001$, <표 9> 참조).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도덕기반이 정치적 관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차별반대 도덕기반만 정적인 관련성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0, p < .001$). 자신과 타인의 권리가 거부되거나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민감한 도덕기반을 가진 응답자는 정치적 관용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돌봄동정, 전통충성, 혐오거부 등 다른 도덕기반은 정치적 관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도덕기반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효과

	정치적 관용						
	<i>B</i>	β	<i>SE</i>	<i>t</i>	<i>p</i>	95% CI	
						<i>LL</i>	<i>UL</i>
(상수)	2.12		0.24	8.70	0.000	1.65	2.60
여성	-0.02	-0.02	0.04	-0.39	0.695	-0.10	0.07
나이	-0.00	-0.04	0.00	-1.01	0.314	-0.01	0.00
교육	0.11	0.10	0.04	2.78	0.006	0.03	0.19
지위	0.03	0.04	0.03	1.00	0.316	-0.02	0.07
전라출신	-0.08	-0.04	0.07	-1.11	0.267	-0.21	0.06
경상출신	-0.10	-0.08	0.05	-2.18	0.03	-0.20	-0.01
정치이념	0.00	0.00	0.02	0.01	0.992	-0.04	0.07
정치관여	0.11	0.15	0.03	3.95	0.000	0.05	0.16
돌봄동정	0.02	0.03	0.03	0.69	0.493	-0.04	0.09
차별반대	0.17	0.20	0.04	4.56	0.000	0.10	0.24
전통충성	-0.04	-0.05	0.03	-1.22	0.224	-0.09	0.02
혐오거부	0.04	0.06	0.03	1.31	0.189	-0.02	0.10
<i>F</i> (12,683)	8.28 (<i>p</i> = .000)						
수정된 <i>R</i> ²	.112						

주 1. *N* = 696.

주 2. '여성'은 여성이 1, 지역변수에서는 '전라출신'은 광주, 전남, 전북 출신이 1, '경상출신'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출신이 1, 나머지 서울, 경기, 제주 등 지역은 0으로 코딩했음.

5. 결론 및 논의

우리는 이 연구에서 하이트가 제시한 도덕기반 이론에 따라 도덕기반의 구조적 특성을 탐구하고 도덕기반이 정치이념 및 정치적 의견표명과 관용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를 검토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서 발견의 요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트가 제시한 도덕기반, 즉 (가) 돌봄-위해, (나) 공정-부정, (다) 충성-배신, (라) 권위-전복, (마) 고귀함-비속함 등 5요인구조를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하이트의 5요인구조를 그대로 한국사회에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하이트의 문항을 이용해서 모형적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한국사회에 적합

한 도덕기반을 재구성한 결과, (가) 돌봄동정, (나) 차별반대, (다) 전통충성, (라) 혐오거부 등 4요인구조가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모형은 비록 하이트의 모형과 구조적으로 다르지만, 요인 내 문항을 비교해 보면 요인 간 의미적 대응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자료에서 얻은 돌봄동정과 차별반대 요인은 의미적으로 각각 하이트의 돌봄-위해와 공정-부정 요인과 유사하며, 전통충성은 하이트의 충성-배신 및 권위-전복의 2요인을 종합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소속 집단에 대한 결속과 충성심을 의미하는 신념과 집단 내적인 위계관계나 권력관계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신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혐오거부는 하이트의 고귀함-비속함에 대응한다고 하겠다. 결국 우리는 하이트가 제시한 도덕기반의 갈래는 사회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도덕성의 내용적 기초는 문화 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해석한다.

둘째, 우리는 또한 도덕기반과 정치이념의 관계를 탐구했다. 4요인 중에 차별반대 도덕기반은 정치적 보수주의와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전통충성 도덕기반은 정치적 보수주의와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나머지 2가지 도덕기반 요인들, 즉 돌봄동정과 혐오거부는 정치이념과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형성한 도덕기반 중 일부 요인만 정치이념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한국인의 정치이념의 분화가 미약함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한국인의 도덕기반의 정치적 함의가 뚜렷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결과이다. 특히 살인, 동물학대 등의 문항을 포함한 도덕기반인 돌봄동정이 정치적 진보성과 관련이 없고, 역겨움, 혼란 등의 문항을 포함한 혐오거부 요인이 정치적 보수성과 관련이 없다는 발견에 근거해 추론해 보면, 한국인의 정치이념은 이 두 도덕기반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에서 도덕기반은 정치적 의견표명을 설명하는 데 유효한 변수임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돌봄동정과 혐오거부 등의 도덕기반이 강한 개인의 경우 정치적 의견표명을 자제하지만, 차별반대와 전통충성 등의 도덕기반이 강하면 정치적 의견표명이 활발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차별반대가 정치적 진보성과 관련이 있고, 전통충성이 정치적 보수성과 관련을 맺는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시민들 모두 각각 다른 이유로 정치적 의견표명을 하리라는 이 연구의 애초 기대에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차별반대 도덕기반은 정치적 관용과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이 관계 역시 정치이념은 직접적으로 정치적 관용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한 조건에서의 분석 결과였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관용은 특별한 유형의 도덕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 정치적으로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경향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연구는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한 도덕기반의 모형을 구성하고, 이런 도덕기반이 정치이념, 정치적 의견표명 및 관용과 맺는 관계를 탐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후속 연구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하이트가 제시한 3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도덕기반측정 설문’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주성분분석을 통해서 재선택한 13개 문항을 바탕으로 한국형 도덕기반을 구성하는 결과를 제시했는데, 이는 방법론적으로 과도한 ‘자료의존적 분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특히 이 논문의 심사평가자 중 한 분은 하이트의 30개 문항에서 13개의 문항을 선택해서 한국형 도덕기반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정치성향을 분석하는 일이 방법론적으로 자료에 대한 과적합화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4요인 모형을 정리해서 제시한 이유는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형 설문 문항을 이용해서 본격적인 한국사회형 도덕기반의 구조모형을 구성해 볼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애초에 하이트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도덕기반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하이트가 원래 제시한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덕기반측정 설문’을 번역해서 사용했는데, 번역 과정에서 척도의 의미적 타당성의 훼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 보면, 번역 자체가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작업이기에, 하이트의 이론을 따르더라도 각 문화적 맥락에 따른 고유한 표현과 단어를 사용해서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즉 문화적으로 특화된 문항을 이용한 요인구조 모형을 시도하는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특수성의 문제는 문항이 갖는 의미의 맥락 수준을 넘어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하이트의 도덕기반은 돌봄-위해, 권위-전복 등과 같이 하나의 도덕기반이 양방향 값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구성했는데, 한국인의 도덕기반은 이런 양방향 극성을 갖는다고 말하기 어려워 보였다. 또한 도덕규칙을 ‘하지 말아야 한다’의 금지명령과 ‘해야 한다’의 의무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이트의 도덕기반도 금지명령과 의무명령으로 구분해서 측정하는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선행연구에서는 도덕 관련성 문항과 도덕 판단 문항 중 후자에서만 하이트의 모형과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맥락정보를 활용하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한국 문화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제시된 바 있다(이재호·조궁호, 2014; 정은경 등, 2016).

둘째, 우리 연구결과는 하이트의 모형이 이론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모형의 문화보편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하이트가 제시한 도덕기반의 5요인구조 모형 자체가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일단 하이트의

모형을 한국사회에 적용해 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했지만, 과연 애초에 5요인 모형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반성해 보직하다. 하이트(2012/2014)도 공정-부정 도덕기반이 평등(equality)과 비례성(proportionality)을 동시에 함의할 수 있기에, 요인구조 모형을 달리하는 새로운 모형을 구성할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5가지 도덕기반에 자유와 억압(liberty/oppression)을 추가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이트의 모형 수정은 같은 자유주의적 경향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유'의 의미가 평등기반 자유의식이 강한 문화와 비례성 판단 기반 공정성 의식이 강한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론적 함의를 담고 있다. 우리는 문화보편적인 일원적 모형을 고집해서 분석하는 것보다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문화의존적인 대안적 모형구성을 시도하되, 그런 대안적 다양성 속에서 발현하는 문화 간 유사성 또는 범문화적 공통성을 찾아나가는 방식이 이론적으로나 분석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덕기반이 정치적 의견표명과 관용과 같은 정치적 소통 양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이 결과가 함의하는 바를 따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차별반대 도덕기반과 전통충성 도덕기반을 중시하는 사람은 정치적 의견표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차별반대 도덕기반이 강한 사람은 금지명령에 민감하여 이의제기와 항의와 같은 표현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전통충성 도덕기반이 강한 사람은 의무명령에 민감하기에 염려와 우려와 같은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표명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이 각각 어떤 내용으로 정치적 의견표명을 하며 어떤 정서를 표출하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도덕기반에 따른 정치적 의견표명의 증감 양상뿐만 아니라 질적인 양상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 <한국정당학회보>, 12권 3호, 5-28.
- 강원택 · 김병연 · 안상훈 · 이재열 · 최인철 (2014).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파주: 21세기북스.
- 김무경 · 이갑윤 (2005). 한국인의 이념정향과 갈등. <사회과학연구>, 13권 2호, 6-32.
- 김정훈 (2013). 18대 대선의 의미와 진보의 재구성. <경제와 사회>, 통권 97호, 121-154.
- 박찬욱 (2005).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14권 1호, 147-193.
- 송종길 · 박상호 (2006). 정치관여도, 미디어 중요성, 정치냉소주의와 정치 효능감이 정치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0권 3호, 166-197.
- 송현주 · 신승민 · 박승관 (2006).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이견 읽기가 논변 구성과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0권 5호, 160-183.
- 윤성이 · 이민규 (2011). 한국사회 이념측정의 재구성. <의정연구>, 17권 3호, 63-82.
- 이건혁 · 황현서 · 심민선 · 박승관 (2004). 수용자의 이슈 관여, 이념 극단성, 정치 참여가 미디어 분리와 불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8권 4호, 198-217.
- 이내영 (2009).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의 변화와 이념투표. <평화연구>, 17권 2호, 42-72.
- 이재호 (2014). <정치성향에 따른 도덕 판단기준의 차이>.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호 · 조궁호 (2014). 정치성향에 따른 도덕 판단기준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권 1호, 1-26.
- 이준웅 (2012, 12월). <대통령 선거 예측의 문제와 판세분석 조사의 개선 방안>. 한국방송학회 대선 방송 진단세미나 '대선 여론조사와 방송사 출구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 정은경 · 박상혁 · 이수란 · 손영우 (2016).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덕적 기반 질문지 적용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권 3호, 47-61.
- 정은경 · 손영우 (2011).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권 3호, 727-741.
- 정은경 · 정혜승 · 손영우 (2011).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용산재개발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권 4호, 93-105.
- 정일권 · 이준웅 · 배영 (2013). 인터넷 교류범위와 자기노출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과 세대 효과. <언론과 사회>, 21권 2호, 160-204.
- 조성대 (2008). 균열구조와 정당체계.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169-198.
- 한석준 (2013). <한국의 대중은 이념적으로 추론하는가?: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스키마와 기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황용석 · 양승찬 · 이준웅 · 이원태 (2011). 인터넷에서 의견추구성향과 정치참여변인과의 관계연구.

- Berinsky, A. J. (1999). The two faces of public opin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3(4), 1209-1230.
- Campbell, A., Converse, P. E., Miller, W. E., & Stokes, D. E. ([1960] 1980). *The American voter* (Unabridged e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 Vries, R. E., Bakker-Pieper, A., Konings, F. E., & Schouten, B. (2013). The communication styles inventory (CSI): A six-dimensional behavioral model of communication styles and its relation with personality. *Communication Research*, 40(4), 506-532.
- Emler, N. (2002). Morality and political orientations: An analysis of their relationship.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3, 259-291.
- Feldman, S. (2013). Political ideology. In L. Huddy, D. O. Sears, & J. S. Levy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2nd e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Franks, A. S., & Scherr, K. C. (2015). Using moral foundations to predict voting behavior: Regression models from the 2012 US presidential election.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15(1), 213-232.
- Frank, T. (2007). *What's the matter with Kansas?* 김병순 (역) (2012). 〈가난한 사람들은 왜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서울: 갈라파고스.
- Gibson, J. L. (2006). Enigmas of intolerance: Fifty years after Stouffer's communism, conformity, and civil liberties. *Perspectives on Politics*, 4(1), 21-34.
- Goren, P. (2004). Political sophistication and policy reasoning: A reconsider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3), 462-478.
- Graham, J., Haidt, J., & Nosek, B. A. (2009). Liberals and conservatives rely on different sets of moral found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5), 1029-1046.
- Graham, J., Nosek, B. A., Haidt, J., Iyer, R., Koleva, S., & Ditto, P. H. (2011). Mapping the moral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2), 366-385.
- Gudykunst, W. B. (1998).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perspectives on communication: An introd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2(2), 107-134.
- Haidt, J. (2012). *The righteous mind: Why good people are divided by politics and religion*. New York, NY: Pantheon. 왕수민 (역) (2014). 〈바른 마음〉.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Hamill, R., Lodge, M., & Blake, F. (1985). The breadth, depth, and utility of class, partisan, and ideological schemat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4), 850-870.
- Ho, S. S., & McLeod, D. M. (2008). Social-psychological influences on opinion expression in face-to-face and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search*, 35(2), 190-207.
- Inbar, Y., Pizarro, D., Iyer, R., & Haidt, J. (2012). Disgust sensitivity, political conservatism, and voting.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3(5), 537-544.
- Iyer, R., Koleva, S., Graham, J., Ditto, P., & Haidt, J. (2012). Understanding libertarian morality:

- The psychological dispositions of self-identified libertarians. *PloS one*, 7(8), e42366.
<http://dx.doi.org/10.1371/journal.pone.0042366>
- Jost, J. T. (2006). The end of the end of ideology. *American Psychologist*, 61(7), 651-670.
- Jost, J. T., Glaser, J., Kruglanski, A. W., & Sulloway, F. (2003).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 339-375.
- Jost, J. T., Nosek, B. A., & Gosling, S. D. (2008). Ideology: Its resurgence in social, personality, and political psycholog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2), 126-136.
- Kerlinger, F. N. (1984). *Liberalism and conservatism: The nature and structure of social attitudes*. Hillsdale, NJ: Erlbaum.
- Kim, K. R., Kang, J. S., & Yun, S. (2012). Moral intuitions and political orientati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sychological reports*, 111(1), 173-185.
- Knight, K. (2006). Transformations of the concept of ide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0(4), 619-626.
- Koleva, S. P., Graham, J., Iyer, R., Ditto, P. H., & Haidt, J. (2012). Tracing the threads: How five moral concerns (especially Purity) help explain culture war attitud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6(2), 184-194.
- Lakoff, G. (2004).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유나영 (역) (2006).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미국의 진보 세력은 왜 선거에서 패배하는가>. 서울: 삼인.
- Lane, R. E. (1962). *Political ideology: Why the American common man believes what he does*. New York, NY: Free Press.
- Lewis, G. J., & Bates, T. C. (2011). From left to right: How the personality system allows basic traits to influence politics via characteristic moral adaptation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02(3), 546-558.
- Lodge, M., & Hamill, R. (1986). A partisan schema for political information process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2), 505-519.
- Miller, D. T. (1999). The norm of self-interest. *American Psychologist*, 54, 1053-1060.
- Mondak, J. J., & Halperin, K. D. (2008).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personality and political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2), 335-362.
- Robinson, J. P., Shaver, P. R., & Wrightsman, L. S. (1999).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cheufele, D. A., & Eveland, W. P. (2001). Perceptions of 'public opinion' and 'public' opinion ex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3(1), 25-44.
- Skitka, L. J., Bauman, C. W., & Mullen, E. (2004). Political tolerance and coming to psychological closure following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An integrative approac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6), 743-756.
- Stouffer, S. (1955). *Communism, conformity, and civil liberties*. New York, NY: Doubleday.
- Sullivan, J. L., Marcus, G. E., Feldman, S., & Piereson, J. E. (1981). The sources of political

- tolerance: A multivariate analy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1), 92-106.
- Sullivan, J. L., & Transue, J. E. (1999). The psychological underpinnings of democracy: A selective review of research on political tolerance, interpersonal trust, and social capita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1), 625-650.
- Sullivan, J. L., Walsh, P., Shamir, M., Barnum, D. G., & Gibson, J. L. (1993). Why politicians are more tolerant: Selective recruitment and socialization among political elites in Britain, Israel,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1), 51-76.
- Tedin, K. L. (1987). Political ideology and the vote. *Research in micropolitics*, 2(1), 63-94.
- Van Leeuwen, F., & Park, J. H. (2009). Perceptions of social dangers, moral foundations, and political orient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3), 169-173.
- Vecchione, M., & Caprara, G. V. (2009). Personality determinan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contribution of traits and self-efficacy belief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4), 487-492.

최초 투고일 2017년 4월 14일

게재 확정일 2017년 9월 15일

논문 수정일 2017년 10월 9일

Abstract

The Effects of Moral Foundations on Political Ideology, Political Expression and Tolerance

A South-Korean Remodeling of Haidt's Moral Foundation Model

Wonsik Ryu

Mas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e Woong Rhe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 web-based survey was conducted to explore whether the five-factor model of Haidt's moral foundations can be replicated in a South Korean sample of 696 adults and to examine whether moral foundations account for political ideology, political expression and tolerance. It was found a four-factor model rather than Haidt's original five-factor one best fit the data. The four factors of Care, Fairness, Royalty, and Hatred revealed some degree of semantic similarities with Haidt's original moral foundation factors. Fairness foundation accounted for political liberalism while Royalty foundation showed a positive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olitical conservatism. Political expression was positively related with Fairness and Royalty foundations, but negatively associated with Care and Hatred foundations. Political tolerance was accounted for by Fairness foundation.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pan-cultural structure of moral foundation and multi-cultural variations of underlying factors of morality.

Keywords: moral foundation theory, political ideology, political expression, tolerance